2023년도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2023년 4월 27일(목) 14시~17시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100

주최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 차

1. 인사말 및 축사 ---------- **05**

2. 발 제

1.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및 협의회 전환을 위한 제안 ---------- 10
   - 윤희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
2.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실천 플랫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41
   -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3. 지역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 62
   - 박찬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3. 토 론 : 지속가능발전 실천기구로의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이성근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101

김찬호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 104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 ---------- 106

오수길 SDSN Korea 사무총장 ---------- 107

2023년도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 행사 취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방안 모색 필요

❍ 지역 지속가능발전 실천기구로서 협의회 역할 정립과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논의의 장 마련

□ 행사개요

❍ 행사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14:00~17:00

❍ 행사장소 :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100

❍ 행사주최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 간	내 용
14:00-14:30 ('30)	[참가접수 및 여는마당] 진행 : 제현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인사말 :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 축 사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기념촬영
14:30~17:00	[정책 포럼] 좌장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14:30~15:30 ('60)	- 발제1 :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및 협의회 전환을 위한 제안 -윤희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 - 발제2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실천 플랫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발제3 : 지역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박찬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5:30~16:50 ('80)	- 토론 : 지속가능발전 실천기구로의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및 자유토론 • 이성근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김찬호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 • 오수길 SDSN Korea 사무총장
16:50~17:00 ('10)	- 정리 및 폐회

인사말 및 축사

인 사 말 씀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전환의 대장정,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거버넌스의 확산,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민참여 의제 발굴과 실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민간과 행정에서 체감하는 기본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온도차는 다소 큰 것 같아보입니다. 이 즈음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지속가능발전 실천기구로서 협의회의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는 장(場)을 마련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현실 인식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그에 반(反)하는 것인지 양분하는 논의이기보다는 복잡한 지속가능성의 생태계를 어떤 방향으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담론 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전환의 대장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한 걸음 내딛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향연이 되길 바랍니다.

축 사

윤창현 국회의원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2023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허재영 상임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리를 빛내고자 참석해주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015년 선언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지난 8년간 우리가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그리고 2030년까지 남은 7년 동안 어떤 과제들을 해소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장기적 과제입니다. 개별 정책이나 사업보다 전략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단일부처의 단기과제로 끝나지 않도록 윤석열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정책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7월 5일)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국정가치로 둔 만큼, 개별부처가 다루기 힘든 포괄적 미래비전 달성을 목표로 각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명확한 컨트롤 타워를 두고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국가운영가치 핵심이 녹아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오늘 정책포럼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의 과제로 더욱 유의미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의정활동 속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가치들이 실천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개최에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제

발제 1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및 협의회 전환을 위한 제안 〉

윤희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과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안

윤 희 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목차

#1,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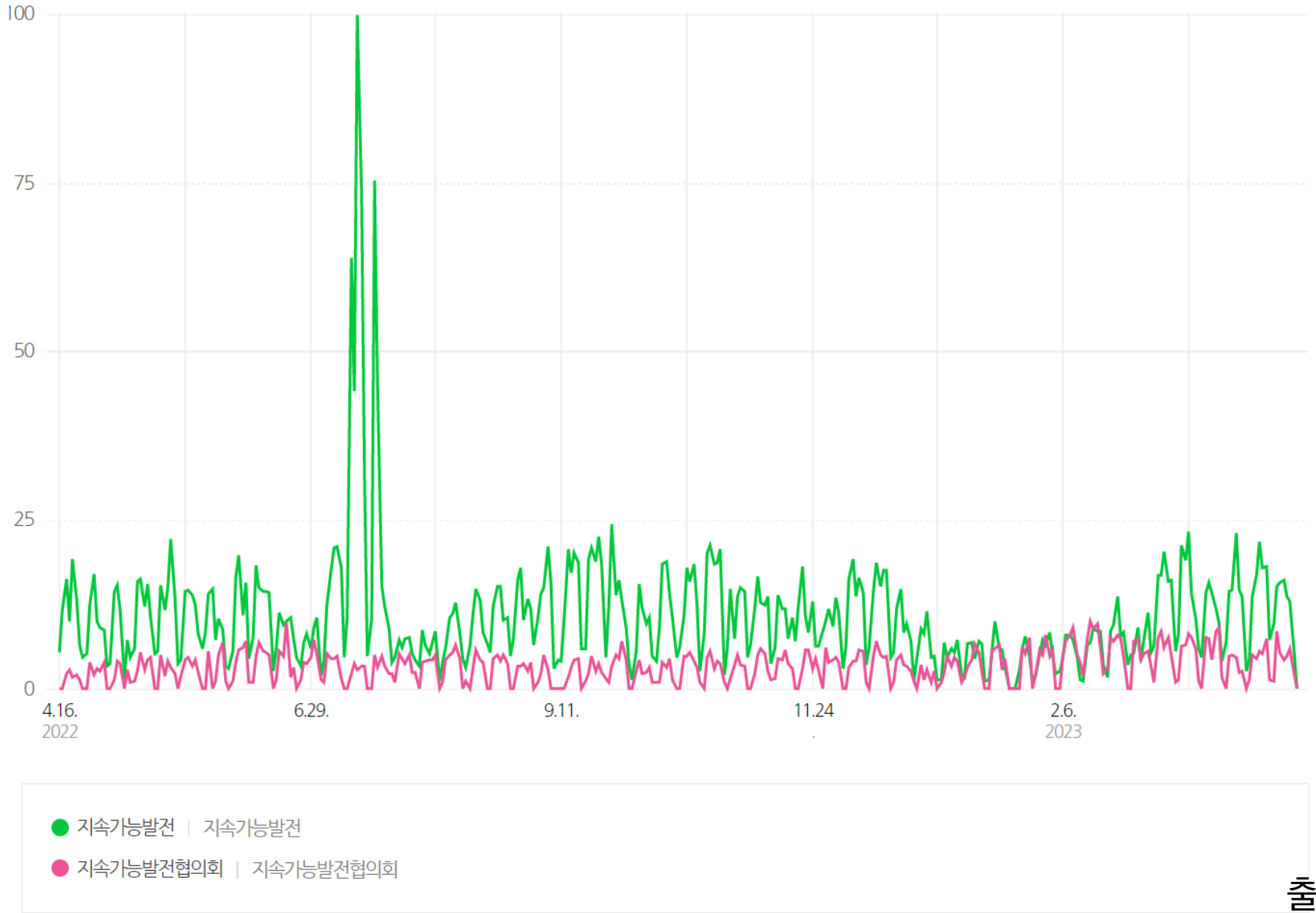
#2,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Part 1,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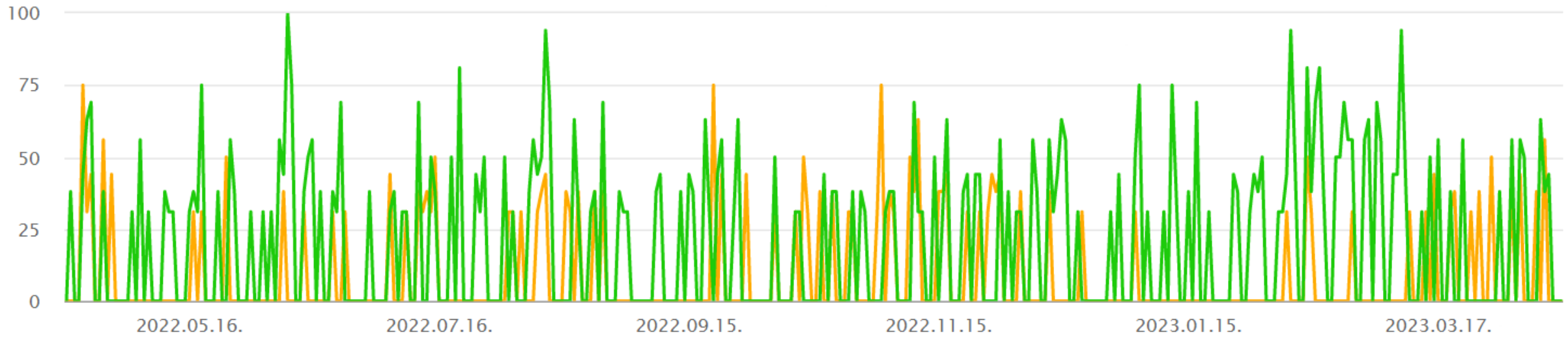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검색 결과(최근 1년)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검색 결과(최근 1년)

검색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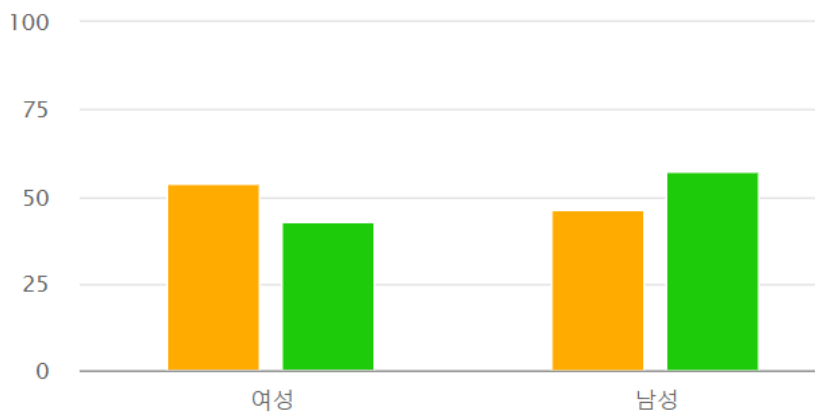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 평균 8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균 20

설정된 기간과 기준(일간/주간/월간)으로 검색량 유입이 가장 많은 기간을 100으로 한 상대적 비율입니다.

출처 : 카카오 데이터트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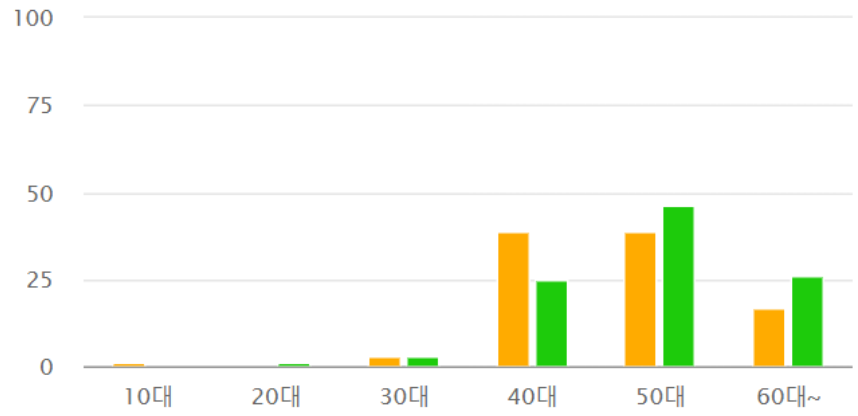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검색 결과(최근 1년)

성별 검색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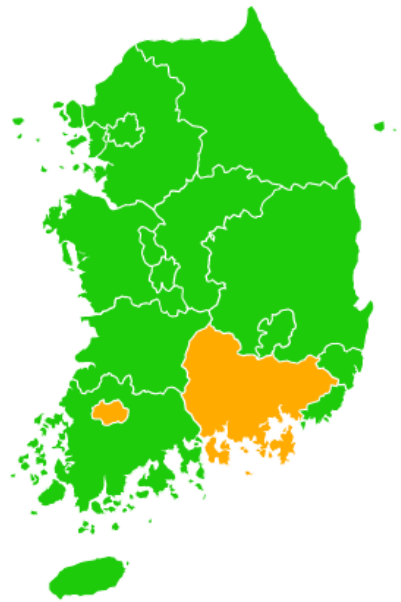
검색어를 입력한 성별 비율입니다.

연령별 검색량 비교



검색어를 입력한 연령별 비율입니다.

지역별 검색량



가장 많이 검색된 지역을 100으로 한 상대적 비율입니다.
지역별 검색량은 모바일을 기준으로 추정된 값입니다.

● 지속가능발전 평균 8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균 20

설정된 기간과 기준(일간/주간/월간)으로 검색량 유입이 가장 많은 기간을 100으로 한 상대적 비율입니다.

출처 : 카카오 데이터트랜드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조사개요

목적 및 배경

- 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파악
-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요구 대응능력 고도화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에 대한 자료 구축

조사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 2023년 3월 7일(화) ~ 3월 24일(금)
- 조사대상 :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조사방법 : 이메일 발송 및 전화 확인(기간 근로자 1인 채용 : 5~7일)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조사 내용

협의회 일반현황

- 협의회 현황, 사무국현황, 사업(2022년 대표사업, 추진 사업수)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

-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명(소관부서, 담당자), 제도적 지원근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L-SDGs 현황
- 단체등록유형(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예산현황

- 2022년과 2023년 지자체 총 예산, 담당부서 총 예산, 총계, 본사업비(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보조사업(지자체보조사업, 기후넷 사업 등), 특별회계(기업협력사업, 후원금 등)

인건비 산정 기준

-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정해진 직제 체계 작성(급수 및 호봉, 급수 책정 기준, 호봉 책정 기준, 기타 기준), 수당(직급보조비, 정액 급식비, 상여금, 기타 수당), 직원 채용 방법

사무국 및 인건비 현황

- 사무국 활동가 명단 및 인적사항, 위촉일/입사일, 상근여부, 근무년차, 인건비 기준, 연간 인건비, 공개여부

추진사업

- 사업유형, 사업명, SDGs 유형

2022년 발간자료 현황

- 발간자료명, 발간자료 유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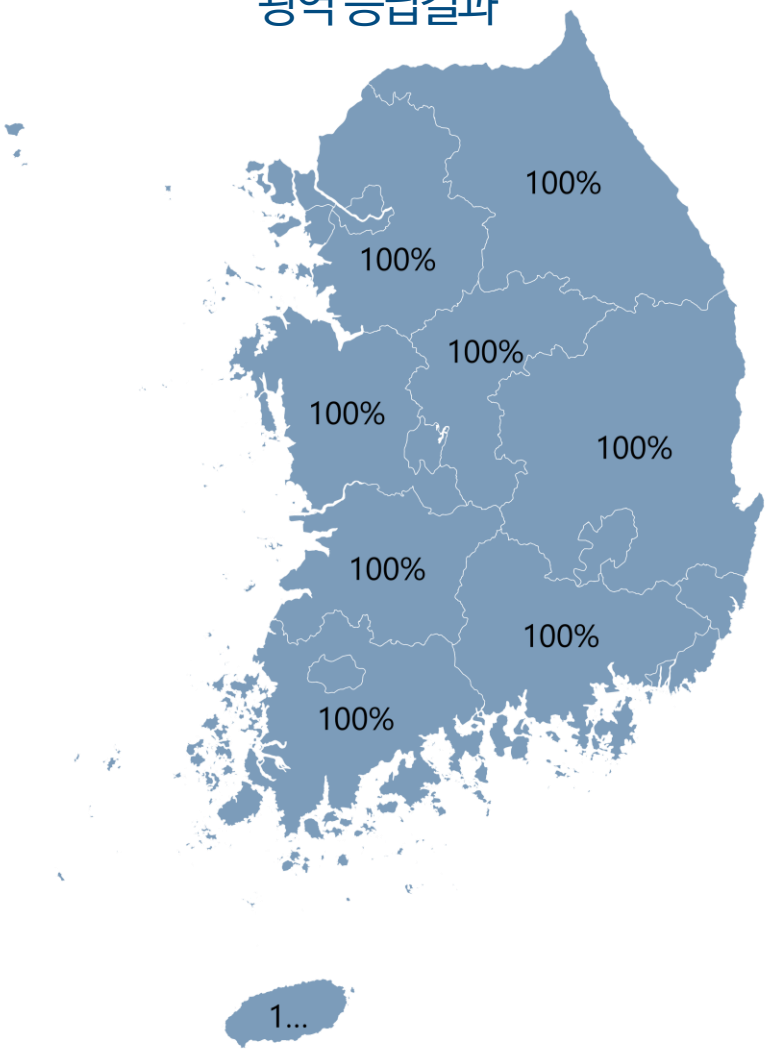
응답 현황

응답지역 : 78곳

광역 17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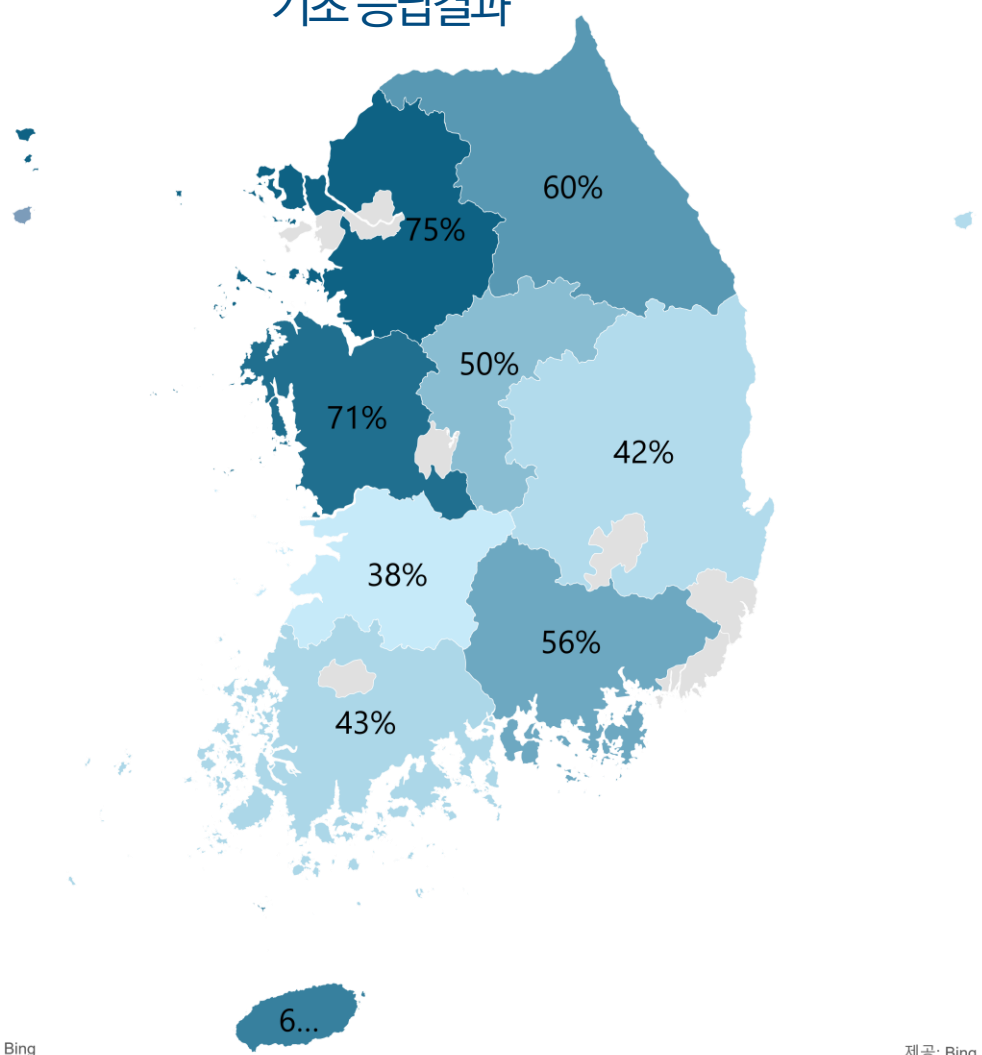
기초 61곳

광역 응답결과



제공: Bing
© GeoNames, Microsoft, TomTom

기초 응답결과



제공: Bing
© GeoNames, Microsoft, TomTom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담당행정부서

담당부서

기획부서	20
전담부서	18
사업부서	32

제도적 지원근거

지속가능발전 조례	72
협의회 포함 여부	32

협의회 지원 근거(설치, 운영, 지원 조례)

SD기본조례	7	인천, 경남, 안성, 광주, 연천, 청주, 평택
협의회 설치 및 지원조례	64	
환경 기본조례 등	10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전북, 제주, 오산, 원주, 장성, 통영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L-SDGs 현황

L-SDGs 교육 추진 여부

추진(30) 계획중(17) 미추진(24)

L-SDGs 교육대상

지속협 위원(38) 시민(6) 공무원(1)

* 위원 체계가 회원제로 구성된 협의회, 경남 공무원 대상

L-SDGs 수립여부

수립완료(26) 준비중(36) 무응답(9)

기본전략 수립 여부

수립완료(18) 수립 중(8) 미수립(39)

서울, 충남, 대구, 경남, 광주

전주, 포항, 당진, 수원, 순천, 여수, 의왕, 진주, 통영, 평택, 광명, 원주, 부여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작성(7) 작성 중(10) 미작성(43)

서울, 충남, 대구, 포항, 인천, 수원, 여수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여부

구성(18) 준비 중(14) 미구성(36)

서울, 충남, 경남, 부산, 포항, 신안, 오산, 경주, 광주, 창원, 당진, 수원, 통영, 화성, 광명, 상주, 춘천

사무국 설치지역 : 서울, 오산, 통영, 광명

협의회 내부 규정

59개 지역 : 정관, 운영규정, 운영세칙 등

단체등록유형

사단법인	1	경북
비영리민간단체	25	
임의단체	38	
고유번호증	71	미보유(포항, 서울)

*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없음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여부

구성(18) 준비 중(14) 미구성(36)

서울, 충남, 경남, 부산, 포항, 신안, 오산, 경주, 광주, 창원, 당진, 수원, 통영, 화성, 광명, 상주, 춘천

사무국 설치지역 : 서울, 오산, 통영, 광명

협의회 내부 규정

59개 지역 : 정관, 운영규정, 운영세칙 등

단체등록유형

사단법인	1	경북
비영리민간단체	25	
임의단체	38	

고유번호증	유무	71	미보유(포항, 서울)

*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없음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예산 현황

총 예산	1천만원 이하	2	
	1억원 이하	11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49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8	
	10억원 이상	4	
본 사업비	1천만원 이하	2	
	1억원 이하	17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	22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16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12	
	5억원 이상	4	충남, 인천, 경기, 광주(본 사업비 12억원)

23년 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50% 이하 감소	1	
	전년대비 10~50% 감소	14	
	전년대비 1~10% 감소	15	
	전년 동결	10	
	전년대비 1~10% 증가	14	
	전년대비 10%~50% 증가	13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5	전북, 강원, 원주 / 전남, 시흥(보조사업 없음)
보조사업 비중	보조사업 없음	27	
	10% 미만	13	
	11~20%	12	
	21~50%	15	
	50~99%	6	울산, 원주, 제주, 전북, 대구, 충북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인건비 산정기준

급수 책정기준	공무원 기준	42
	기준없음	15
	생활임금/최저임금 기준	4

	연차	대상자 수	평균 임금
근무연차	1년 미만	50	28,865,761
	2년 이상 5년 미만	93	34,546,819
	6년 이상 10년 미만	41	36,200,197
	11년 이상 14년 미만	24	39,772,420
	15년 이상 19년 미만	10	46,544,983
	20년 이상	6	49,270,600
	금액	**대상자 수**	**평균 근무**
연봉 규모	1천만원 이하	5	3.2년
	1천만원 대	5	3.8년
	2천만원 대	61	2.83년
	3천만원 대	75	5.84년
	4천만원 대	46	7.4년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16	10.3년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조사

발간자료 현황

구분	전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동영상						10		1								6	6		23
리플렛	1	3	10		1		1	1	1			1			1	2	3	2	27
소식지																	1		1
자료집	1	15	55	10	8	31	8	6	9		5	4			10	9	18	23	212
자료집+PDF			4	1									3	7	6		2	4	27
전자문서(PDF)	1	1	2							6			1		1		2		14
지도			1																1
합계	3	19	72	11	9	41	9	8	10	6	5	5	4	7	18	17	32	29	305

어디에서 이 자료를 볼 수 있는가?

Part 2,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

기본목적

- SDGs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방향
  - 전국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심 역할의 방안
  - 지방의제21의 환경 중심의 실천운동 중심의 방향에서 전환
- 전국협의회의 역할과 방향 : 전국 단위의 역할, 명칭 변경 등
- 목표별 네트워크 중앙사무국 역할 제고

요청사항

-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의 지속성
- 조직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광역과 기초의 현안에 대해 판단기준 제시
- 조직진단 및 필요 내용에 대한 흐름과 변화 정리
- 협의회의 향후 방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안 제시

오수길

제현수

권기태

김대광

박정민

박종아

오용석

박정진

박훈

윤희철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찾아가야 할 혁신의 길 :
우리는 어떻게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미와 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장 이전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확산에 지대한 공헌

- 1992년 지구정상회의(리우환경회의) 이후 1996년까지 국가는 의제21을, 지방정부는 지방의제21을 만들도록 권고했음
  - 당시 민주화 운동의 역량과 환경운동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1995년부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폭 확산되기 시작함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가치를 실제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각 지역에서 지난 20여 년 넘게 진행되었고, 지역내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성장과 확산에서 구심점 역할 수행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인식의 확산, 실천의 확산, 정책과 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음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진화한 시대정신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인식 확산이 진전되었으며, 국내에서도 17개 분야별 활동으로 전면 확산의 역할 필요
  - SDGs 등장 이후 조직명을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하고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실천운동을 실행하는 주체로써 시민, 기업, 행정의 중간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음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이해당사자 그룹 참여, 각 지역의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추진 중에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아래에서 위로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었음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협의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 : 전반적인 현실과 한계

지난 20여년 간 그대로 유지된 협의회의 한계

- 20여 년 넘게 협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해왔고, 현재의 문제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지방 협의회 입장에서는 당면한 지역과 협의회의 문제를 각 지역별로 해결하는 '각자도생' 방식을 선택해 전국적인 연대와 협력이 어렵게 만다는 요인을 제공

협의회의 태생적 문제,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의 역할,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 : 사업 추진에만 충실

협의회의 전환은 형식뿐만 아니라 비전, 활동방식 변화에 대한 성찰을 요구

- 조직명을 지방의제21추진기구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한 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인식이 확산
  - 해당 지역의 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의도치 않게 SDGs에 대한 독점이라는 오해와 불편한 시선, 지역의 정서적 지지와 확산의 한계 등장
- SDG 전면화 이후 17개 영역에서 기존단체들과 협의회 활동 영역의 관계 설정이 미진해 기존 단체들의 활동 밥상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협의회가 역할을 가져간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
  - 일부 협의회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변화보다는 조직의 생존 변화로 대응하는 경우도 발생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찾아가야 할 혁신의 길 :
우리는 어떻게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가?

협의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 : 전국 협의회의 현실과 한계

협의회 운영방식의 변화 성찰

- 초창기 지역사회 여러 조직의 연대체로서 역할, 협의체로서 운영, 사무국의 순환제 등 지역내 연대체, 네트워크로 활동
- 과거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방식이 필요
- 전국 협의회는 지역 규합으로 세력화, 이익집단화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되며, 기득권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등장

정책 연구 및 네트워킹 기능보다 사무국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중하는 문제

- 지방 협의회의 회비 납부로는 협의회 사무국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집중
- 기본법 체제 하의 정책 대응, 지방 협의회의 정책 컨설팅 및 교육, 협의회간 네트워킹에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약화되는 문제에 봉착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협의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 : 지방 협의회의 현실과 한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제 하에서 협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

- 협의회의 수준은 지역의 시민사회의 수준과 연결되며, 현재 협의회가 지역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활동에 집중적이지는 못함
- 형식적 구성에는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시민사회와 협력, 경쟁, 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

외부의 시선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 진단 및 해결 필요

- 현재 지방협의회의 소통 채널에 문제에 대해 진단 필요

지방 협의회의 지역내 역할 문제

- 주로 상근활동가 중심의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회가 하나의 조직체(단체)로서 변모하여 지역내 단체간 경쟁과 긴장 관계 형성

협의회 상근자의 직업적 안정성 개선에 대한 대응

- 지역에서는 안정적 고용 형태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
- 하지만 실제 출연 출자기관의 사례에서 산하기관이 되면 관료화가 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찾아가야 할 혁신의 길 :
우리는 어떻게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가?

당면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 : 협의회의 역할과 방향

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써 올바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가?

- 기본법 시대,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에 대한 대응 필요

지속가능발전 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반성과 성찰 필요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협의회는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

2가지 방향의 제안

1. 다른 분야와 다르게 종합성이 강한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현재의 협의회 구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는 디딤돌이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 고민하여 전면 혁신 검토
2. 지역 협의회는 지역단체들 중심의 협의회 취지에 맞는 연대체로 거듭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의 변경과 조직 운영도 전환 검토

- 지역 협의회는 지역에서 중요한 현안이나 미래 의제를 해결하는 단체나 조직으로 전환
- 이탈리아 '에코뮤지엄'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변화한 사례를 참고

협의회 존재의 필요 이유에 대해 전국협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를 대상으로 전국 표준 모델 제시(?)

- 광역시, 광역도, 기초시군, 자치구의 분류를 통해 표준 모델 제시하고, 지역의 특색에 따라 적용 가능성 검토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당면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 : 전국 협의회의 위치와 역할

전국 협의회 운영 및 안정적 재원 확보의 현실과 개선방안

- 전국 협의회 운영 재원은 지방 협의회의 회비 납부로 일부 충당하며, 환경부 사업 예산을 통해 충당하는 형태로 진행됨
  - 과거 운영위를 통해 회비 납부 예산 상승을 합의했지만, 실제 실행되지 못함
- 현재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되면서 전국협 예산이 내년에 대거 변경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전환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됨
- 기초에서 광역까지 전국협으로 연결되는 긍정적 요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회비로 유지되는 구조가 그나마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규정을 만들어 명시적으로 회비 납부를 두는 것도 방안
-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용해 교육 및 정책연구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방 협의회의 교육 지원 활동(사무국처장, 위원, 직원 등)도 도모할 수 있음
  -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협 차원에서 지방 협의회 위원 참가의 경우, 별도의 교육 시간 이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전국 협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전국 협의회가 전국의 협의회만을 위한 협의회가 될 것인가? 또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행동'을 위한 네트워크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 필요
- 현재는 지방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운영되는 전국 협의회를 개선해 느슨한 연대체(네트워크 조직)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은 추대방식으로 진행되어 적절한 운영방식의 전환 검토
- 전국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각종 네트워크가 함께 다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국 협의회 사무총국의 서울 이전도 검토가 필요함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찾아가야 할 혁신의 길 :
우리는 어떻게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가?

당면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 : 전국 협의회의 위치와 역할

기본법 이후 전국 지속협의 중장기 전략

박훈 위원 제안

'지속불가능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 회복

정책 내재화	굿 거버넌스	풀뿌리 활성화	국제협력
• 정당 당론 채택 • 국정 과제화	• 정부 파트너십 • 시민사회연대	• 서비스, 지역연대 • 지역인력양성	• 채널 발굴 • 인력 육성

정책 ⟷ 정무 ⟷ 지역 ⟷ 국제

- '지역 직능 조직 〉 전국 활동 조직' 전환
- 전국–지역, 지역간의 간극 회복(일관성 : 자율성 수위 조절)
- 일하는 목표와 방식의 전환, 활동 인력간의 신뢰 구축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당면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 : 지방 협의회의 위치와 역할

기본법 체제 하에서 행정과의 관계 정립

- 환경부서에서 기획부서로의 주무부서 이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대응 필요

지속가능발전의 종합적인 정책 제안과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협의회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

- SDGs 17개 목표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요구
- 전통적으로 집중해왔던 환경 중심의 활동영역에서 다양한 파트너십과의 연대를 통해 확대의 노력 요구

SDGs 이행을 위한 지방 차원의 컨텐츠 부재 문제 해결

광역과 기초(시군/구)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

- 법제도적 역할의 한계 개선에 대한 방안 논의 필요
  -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가?”
- 현재 지방정부의 법제도 속에서 조례상 법정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단순한 민간단체로 해석하고 있음
  - 준정부기구로 인정받는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과거 협의회를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역의 전통적인 시민사회 관점에서는 관료화하는 협의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
- 협의회에 대한 최근 일반적인 경향은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으로 간주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당면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 : 지방 협의회의 위치와 역할

기본법상 협의회의 역할 설정에 따른 위임 및 위탁 기준 적용의 문제 발생

- 협의회의 역할과 행정위임의 사무에 대한 긍정적 요소를 분석하고 부정적, 취약한 점들에 대해 진단 평가를 하고 각 지역에 적용을 권고
- 다만, 일정한 원칙을 지역에 강요해도 이행이 어려운 현실도 고려

협의회 운영 원칙이 부재해 각 지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모범적 운영 원칙을 전국 협의회 차원에서 작성해 권고(표준 정관, 운영규칙 등)
- 기초협의회의 경우 행정체계에 포함해 추진하는 경우도 필요
- 지방 협의회 중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지역은 협의회 명칭 삭제 권고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제 하에서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의 장벽과 변화의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 배경 속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펼쳐왔고, 그 과정에서 성과와 과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내외부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한 발전 방향의 물고를 트는 긍정적인 시도가 있었음

그러나 단 몇 개월만의 논의만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협의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공동의 숙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님

따라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속에 향후 협의회의 혁신을 위한 다채로운 논의의 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현재까지 토론을 진행한 사항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를 협의회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향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위한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함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 2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실천 플랫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 이행 실천 플랫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4월27일(목)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100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합니다

INDEX

01 근황, 현황

02 현안 진단

03 혁신 방향

04 과제

-1. 지역 지속협

정기총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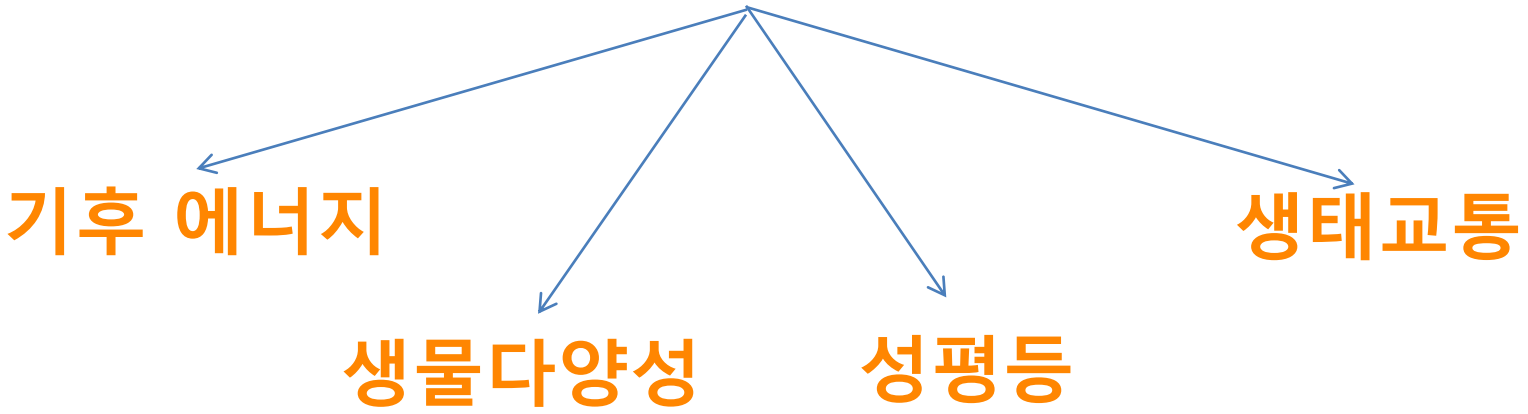
충북, 충남 지속협

전남 지속협

부산, 대구 지속협

-2. 내부 네트워크

의제별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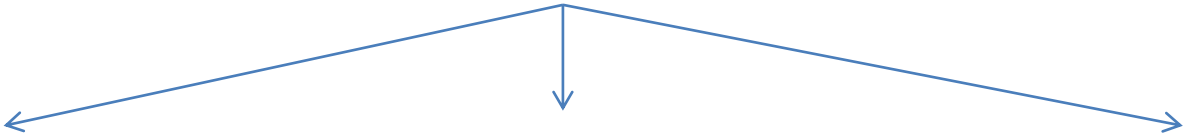
병설기관 →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익법인)

위탁기관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독립기관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3. 외부 네트워크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



한국 지속가능발전학회

POP 평화포럼

성찰 시민사회모임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

POP 미래포럼

거버넌스센터 20주년 기념식

기업 → 현대제철㈜지속가능경영팀

-4. 파트너십(행정)

2023
K-SDGs
환경포럼

환경부

- 녹색전환정책관
- - 녹색전환정책과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회

국무조정실

- 경제조정실
- - 재정금융정책관실
- - -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준비팀

01 근황, 현황
-5. 사무총국

주간 사무총국 회의

사무총장

협력실장

정책연구단장

사무국장

팀장

매니저(간사)

상임회장 오찬미팅

상임회장
+
사무총국회의

국무조정실, 환경부

사업(용역) 관련 회의

SDG 관련 사항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회의

지역 협의회 연맹

공동회장단회의

교육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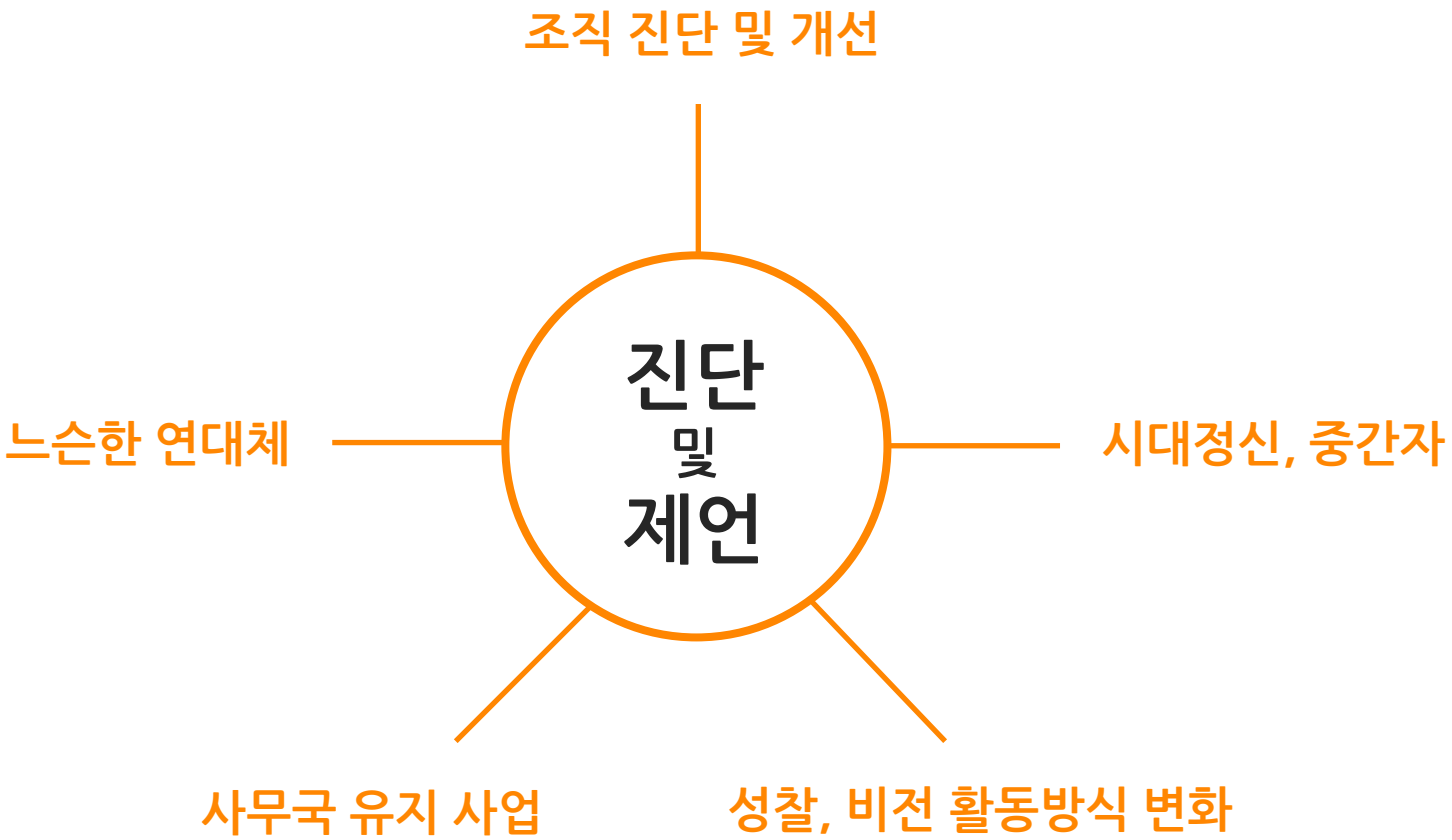
정책위원회

4개 네트워크위원회

'지속가능발전 대회',
'SD정책포럼' 등
기획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02-1. 혁신특위의 진단(제언)



-2. 국제사회의 흐름-1.유엔 미래정상회의(SOTF)

Road to the Summit of the Future (SOTF) and Beyond
유엔 미래정상회의 (SOTF)

2025-2030 : 2030 Agenda / SDGs							2045	205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30		
UN70 2030 Agenda SDGs	UN75 Dedaration	Our Common Agenda (OCA)	Transformative Education Summit (TES)	2nd SDGs Summit	Summit of the Future (SOTF) Pact for the Future	2030 Agenda/ SDGs	UN100 Post-SDGs	Net Zero Emission Target

출처: POP대화 미래포럼 , 2023.4.21. 이성훈

유엔 75주년 Our Common Ag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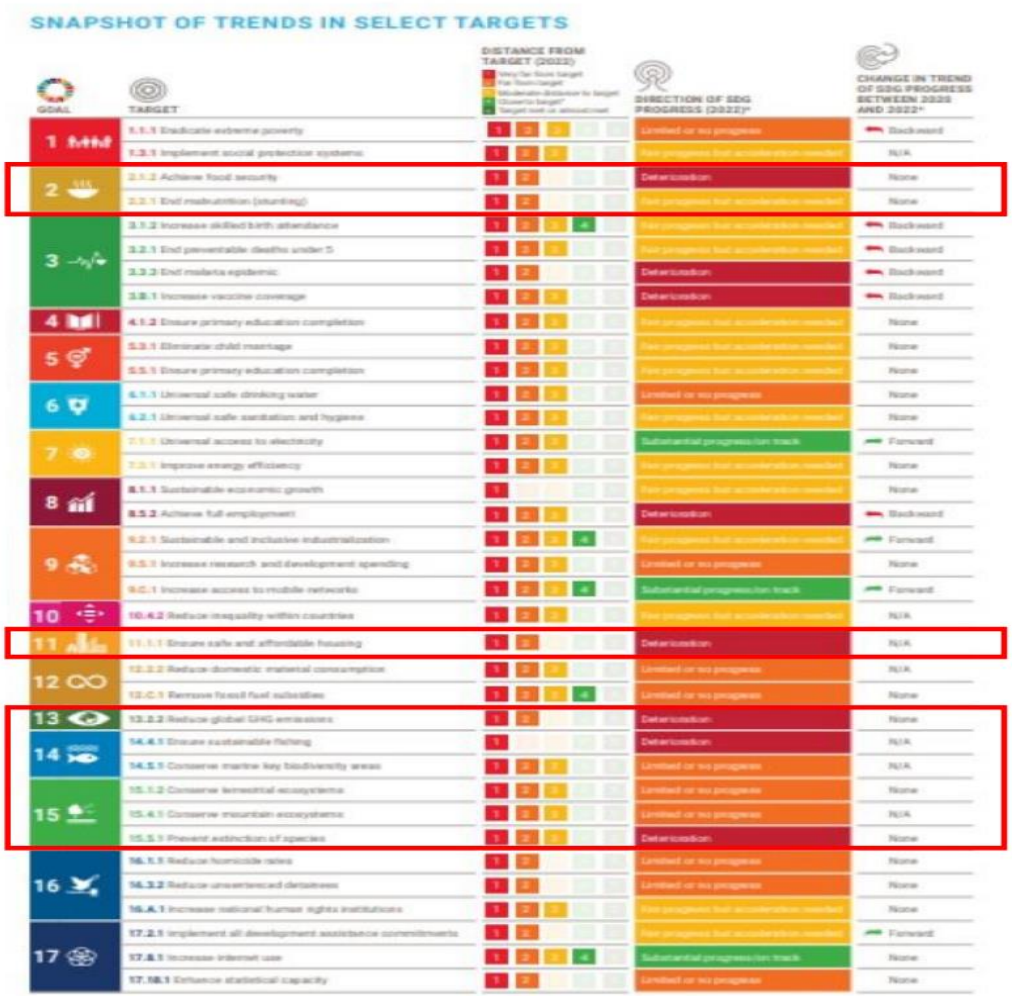
출처: POP대화 미래포럼 , 2023.4.21. 이성훈

2020년 유엔 75주년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결의안의 12개 약속 실천 방안 준비요청

2021년 9월 10일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공동의 의제(OCA) 보고서 제출

OCA 보고서는 유엔의 지난 25년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연계되고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요청

02-3. 제2차 SDGs 정상회의 전망 -1. 글로벌 SDGs 이행 현황



-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심지어 2050년까지 SDGs 달성이 요원할 것으로 전망.
- 절대빈곤 감소 등 일부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영양부족, 거버넌스 관련 목표는 거의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대기오염 및 환경보건, 농업용수 이용, 상대적 빈곤율, 음식물쓰레기,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보호의 경우, 후퇴할 것으로 전망

출처: POP대화 미래포럼 , 2023.4.21. 윤경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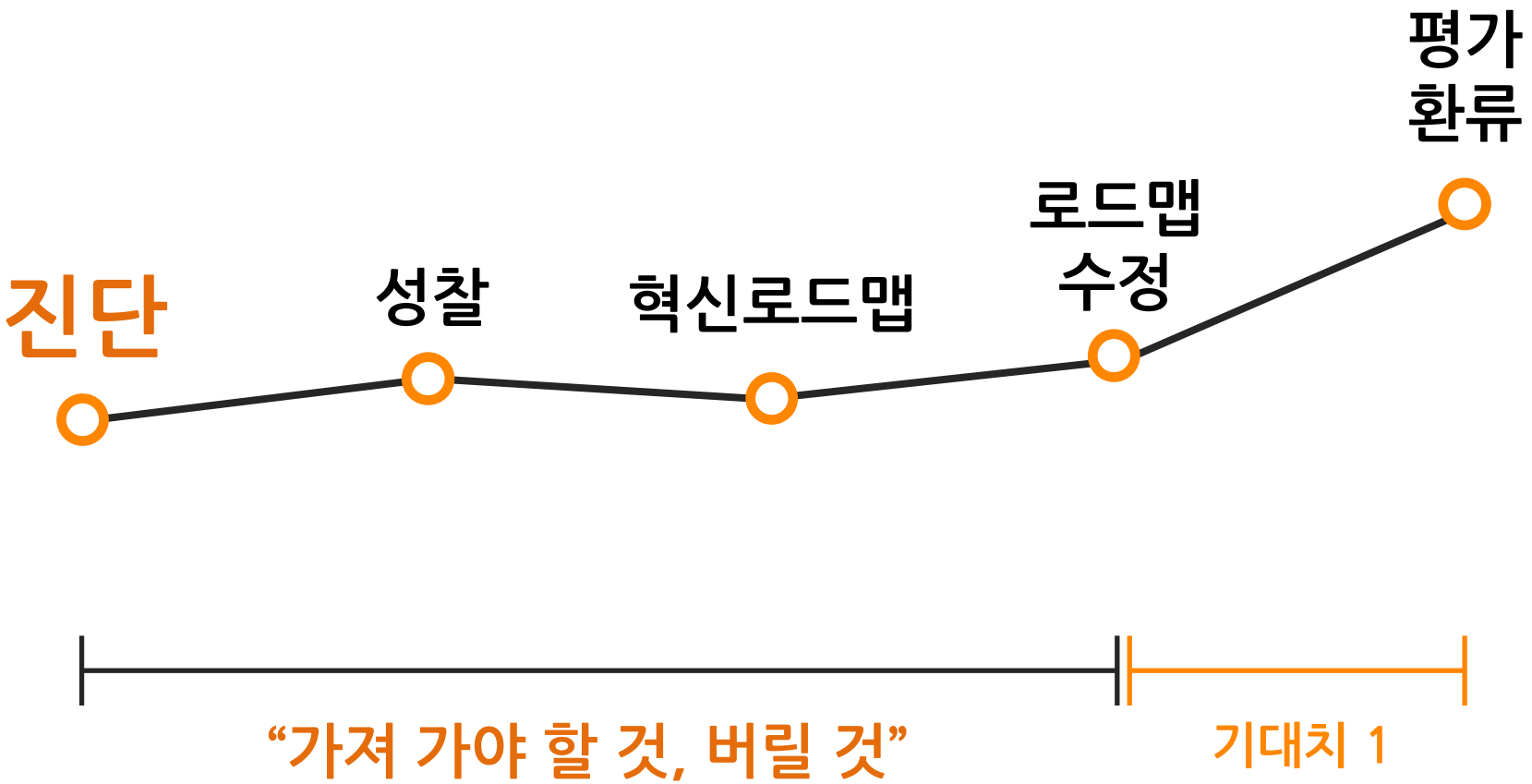
-3. 제2차 SDGs 정상회의 -2. 시민사회 대응(SDGs시민넷)

제2차 SDGs 정상회의 시민사회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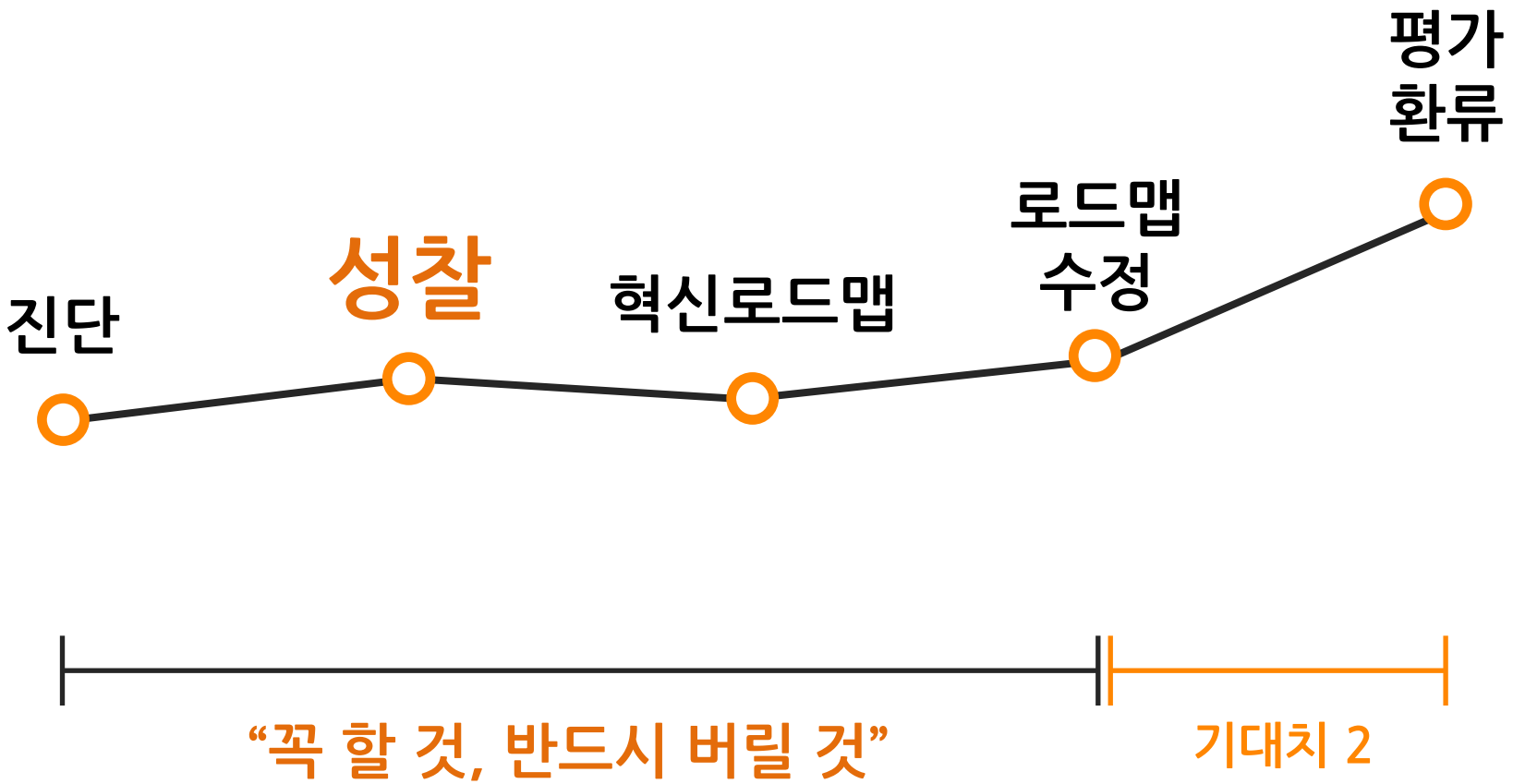
- 2023년 5월 중 <2023 유엔SDGs 이행 점검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발간 및 기자회견 예정
- 한국정부의 지난 4년 이행현황 종합 평가 및 2023 고위급정치포럼 이행점검 목표(SDG 6, 7, 9, 11) 이행 현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및 정책 제언 문건
- **[평가]** ①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담당실무조직(추진단)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등 행정 해태, ②지난 8년 동안 1회 제출에 그친 VNR 제출, ③현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반시민사회, 반기후·환경적 정책 및 정치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평화, 민주주의 위기 직면 등에 대한 문제 지적
- **[요구]** ①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원칙 준수, ②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 및 후퇴하고 있는 목표 중심 재원 및 정책 추진 강화, ③VNR 제출, ④포스트 2030 의제 협상과정에 한국정부의 적극적 참여 등 촉구

출처: POP대화 미래포럼 , 2023.4.21. 윤경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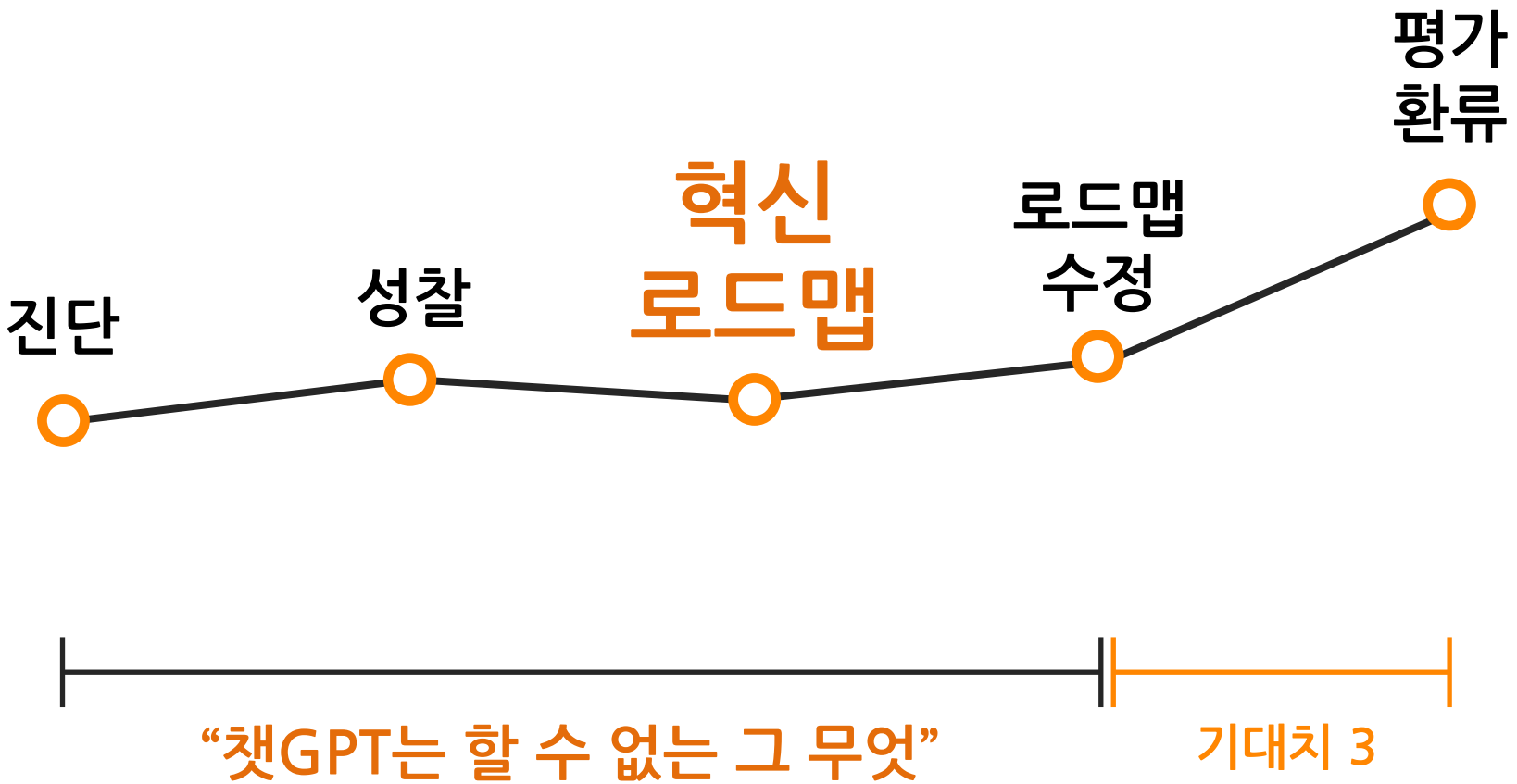
-1. 무엇이 걸림돌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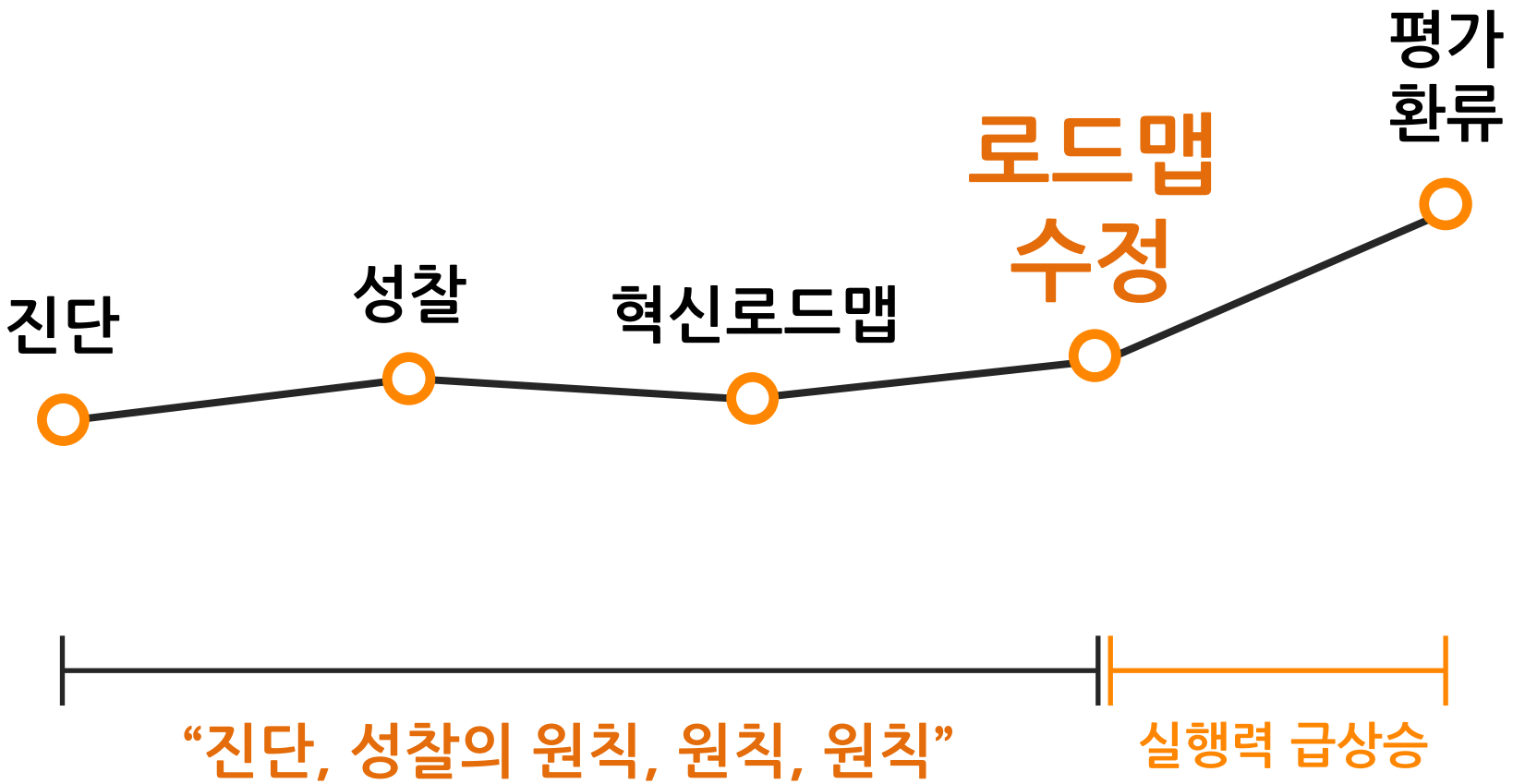
-2. 잘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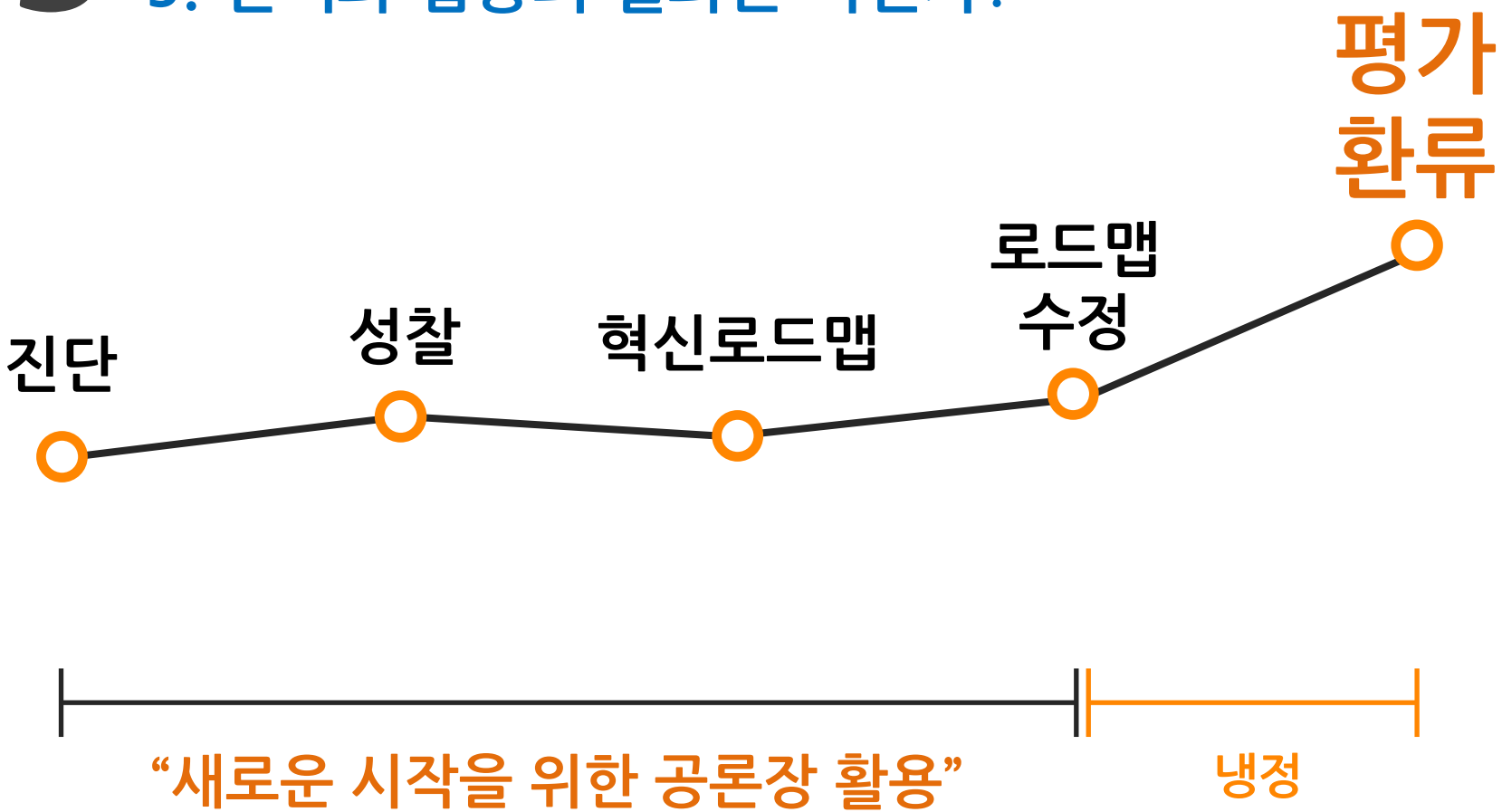
-3. 외부 환경, 자원 활용을 잘 하고 있나요?



-4. 네트워킹, 거버넌스, 선한 영향력



-5. 선택과 집중의 결과는 어떤가?



04 과제

LEAVE NO ONE BEHIND

한 사람의 한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3

〈지역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박찬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지방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 찬 사무처장

2023. 04. 27.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의미

- UN 차원에서 -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도시에서 이기거나 질 것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SDGs의 현지화

The Localization of the SDGs

SDG는 전 세계적이지만 그 성취는
도시와 지역에서 SDG를 현실로 만드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SDGs에는 지방 정부의 책임,
특히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2030 의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30 의제를 주요 국제 개발 프레임워크에 연결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2030 의제는 SDG 1.5, 11.b, 13.1에 대해 동일한 지표를 공유합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13.1.2, 1.5.3, 11.b, 11.b.1과 같은 세부 목표와 지표로 2030 의제에서 직접 참조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im & Focus
- Overarching global development framework for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and Partnership (5Ps)
-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and 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
-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th 169 targets and over 230 respective indicators
- The SDGs are setting a new standard by being universal, interconnected, and indivisible.

Legal Relevance
- Voluntary, non-binding agreement

Supported By
- 193 UN Member States ratified in September 2015

Implementation Period
- 2016 – 2030

Follow-up & Review
-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is the central UN platfrom for the follow-up and review process.
- The **Regional Forum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s the stocktaking body to assess regional implementation.
- **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 submitted to HLPF serve as the basis for regular reviews and provide a platform for partnerships between the national level,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and organizations (Res. 70/1, para 84).
- **Annual SDG Progress Report** supported by the UN Division for SDGs (UN DESA) and the quadrennial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s Report** conducted by the Presid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para. 83)

파리 기후 협정은 기후 행동에 관한 목표 13을 통해 2030 의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변화 중에서도 더 극단적인 날씨, 해수면 상승, 북극 해빙 감소를 통해 지구 온난화 1℃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Panmao Zhai, Co-Chair of IPCC Working Group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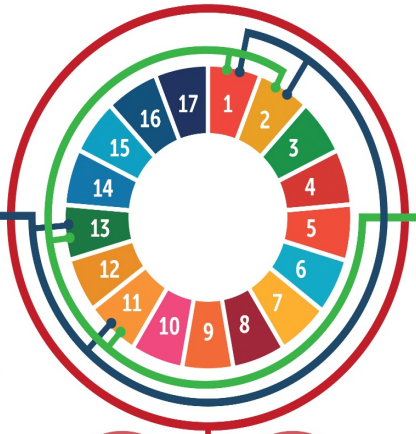
Aim & Focus
- Increase countries' resilience to disasters
- 7 targets and 4 priority actions across sectors
- 38 respecti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developed to measure global implementation progress
- Developed to be consistent with SDG indicators that are used for measuring specific targets of SDG 1, SDG 11, and SDG 13

Legal Relevance
- Voluntary, non-binding agreement

Supported By
- 187 UN Member States

Implementation Period
- 2015 – 2030, with 2005 – 2015 being the baseline

Monitoring & Reporting
- **Sendai Framework Monitor** and **Sendai Framework Readiness Review**
-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Sendai Framework will be reviewed biennially by UNISDR
- Sendai Framework Voluntary Committments
- **Ten Essentials for 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



파리 기후 협정

PARIS2015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CMP11

Aim & Focus
- Keeping global temperature rise well below 2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while striving to cap the increase at 1.5 degrees Celsius

Reporting & Review
- All parties of the Paris Agreement are requested to submit revised NDCs every five years that are recorded in a public register on the UNFCCC website

Legal Relevance
- Countries' commitments are call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which become legally binding as countries formally ratify the Paris Agreement (Article 4).

Supported By
- 175 out of 197 Parties to the Convention

Implementation Period
- 2015 – 2030, with 2005 – 2015 being the baseline

Localization
- The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and Energy sets baselines and reports on voluntary climate adaptation and mitigation actions for local governments and cities.
- Global Climate Action on Human Settlements Reporting Stream chaired by ICLEI.
- Cities, alongside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vited to scale up their efforts and support actions to reduce emissions, build resilience and decrease vulnerability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UNISDR의 '복원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필수 요소' 캠페인은 NUA의 비전과 도시 복원력 육성에 대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일치시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NUA의 3가지 혁신 약속

1. 도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빈곤에 맞서 싸우기
2. 모두를 위한 도시 번영과 기회
3. 생태적이고 복원력 있는 도시와 인간 정착지

새로운 도시 의제 (UNA)

Aim & Focus
- Framework that sets the global standards of achievement i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Focus areas: National Urban Policy,
  Urban Legislation and Regulation,
  Urban Planning and Design,
  Local Economy and Municipal Finance,
  Local Implementation
-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rough its three Transformative Commitments

Legal Relevance
- Voluntary, non-binding agreement

Supported By
- Outcome document of Habitat III – 167 UN Member States ratified in October 2016

Implementation Period
- 2016 – 2036

Monitoring & Review
- The NUA calls for a **quadrennial progress report** on the state of implementation to measure change processes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The **Quito Implementation Platform** includes over 70 voluntary commitments by various partners to implement the NUA.

'복원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필수 요소'는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에 대한 NUA 원칙(c)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GHG 배출량의 **61%**는 도시 NDC 우선 순위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제출된 NDC의 **2/3**는 특정 도시 콘텐츠를 나타냅니다.

UNITED NATIONS ESCAP

UN-HABITAT FOR A BETTER URBAN FUTURE

지역 차원의 조정

지방정부는 2030 의제 이행을 지방에서 운영하기 위해 국가목표의 우선 순위와 기타 국제 개발 프레임워크를 **지역 차원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필요에 기반한 지역 수준의 대응

글로벌 목표를 지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솔루션을 공동으로 만들어** 글로벌 과제 및 목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필요에 기반한 지역 수준의 대응을 도출**합니다.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의미

-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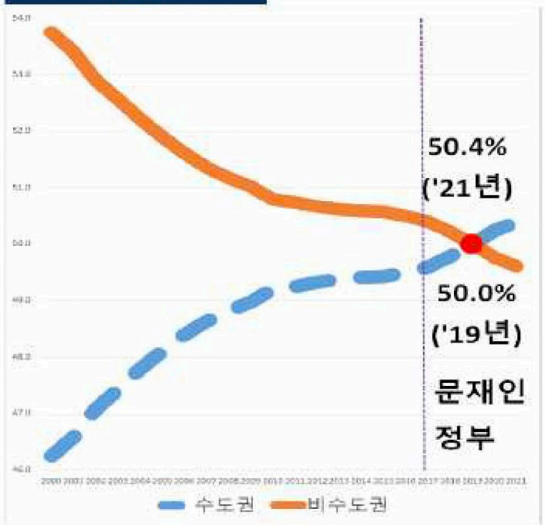
현 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 (지역격차 = 국가위기)

※ 자료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 (2023. 2. 24)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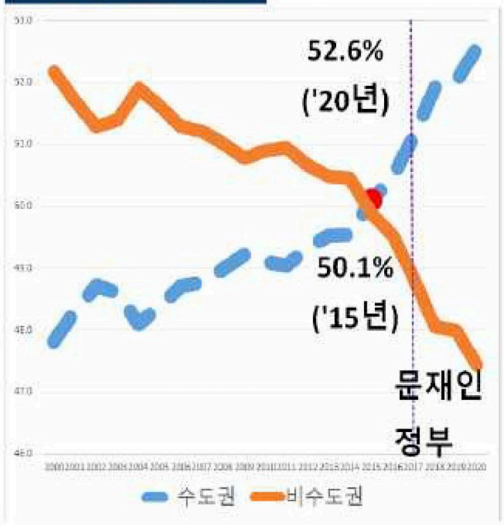
수도권 vs. 비수도권 지표 추이

- (인구) 2019년 비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 추월
- (소득) 201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역전 현상 발생
- (일자리) 비수도권과 임금격차 확대 속에 수도권 취업자수 빠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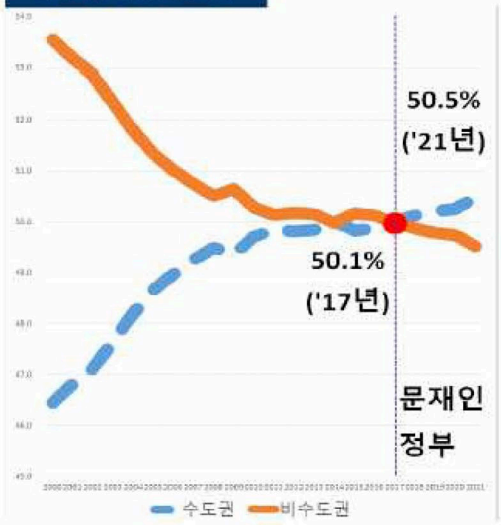
인구



소득 (GRDP)



일자리 (취업자)



현 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 (지역격차 = 국가위기)

※ 자료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 (2023. 2. 24)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 집중과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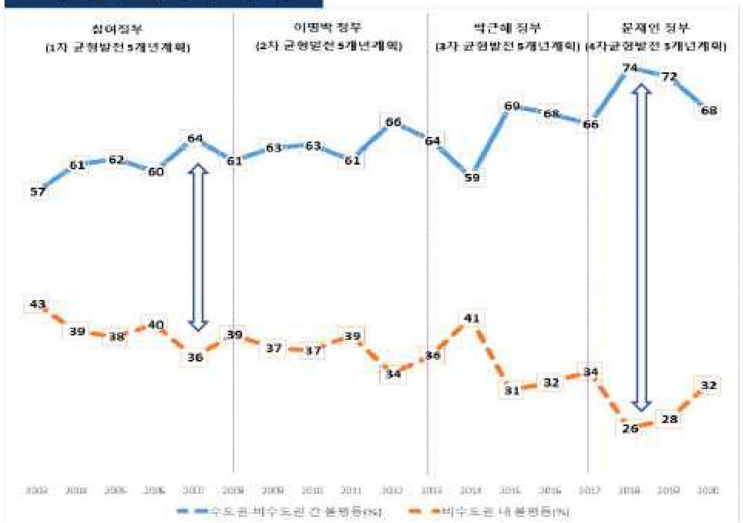
커져가는 수도권 – 비수도권 간 격차

– 국내 지역격차(100) 중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약 70%, 비수도권 내 격차가 약 30% 차지 (산업硏,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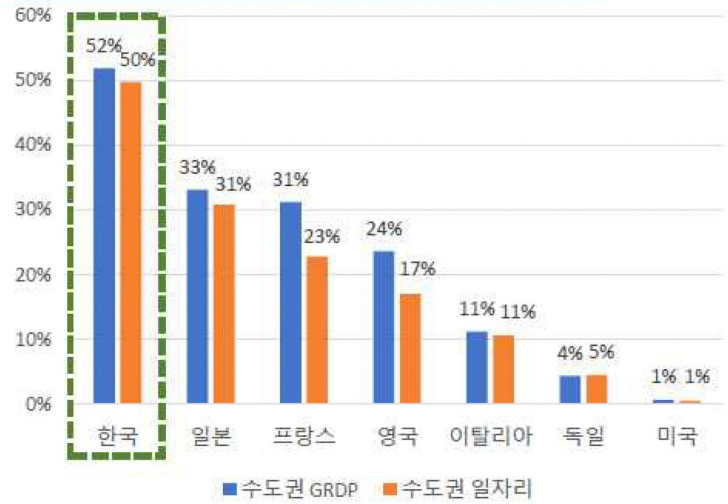
선진국가 대비 월등이 높은 수도권 집중도

– 다른 OECD 국가들 대비 국내 수도권 GRDP, 일자리 비중은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집중도 시현 (국회 입법조사처, 2020)

지역간 격차의 확대



OECD 국가 간 수도권 집중도 비교 ('18년 기준)



현 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 (지역격차 = 국가위기)

※ 자료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 (2023. 2. 24)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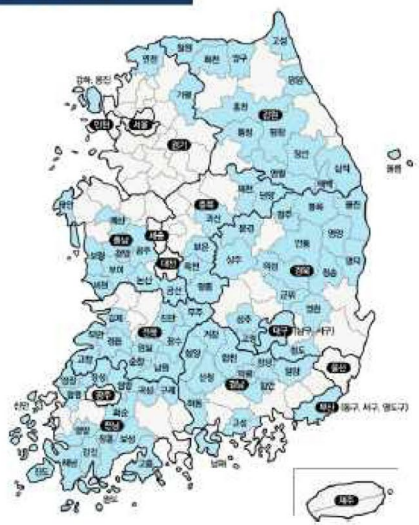
지방 쇠퇴를 넘어 지방 소멸 가속화

–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3중고 속에 226개 기초 지자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

인구 감소, 일자리 · 정주 여건 취약, 인구 유출의 악순환 반복

– 경쟁력을 잃은 84개 한계대학의 62개(74%)가 비수도권에 있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도 빠르게 증가

인구소멸지역



수도권 유입 청년

현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자료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 (2023. 2. 24)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시대

"지방이 주도적으로 국민행복 증진과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정의가 실현된 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 해소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

(공정·자율·희망의 3대 가치 구현)

3대 약속·10대 국정과제 추진

통합추진

자치분권

균형발전

중앙권력의 공정

국토공간의 정의

현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자료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 (2023. 2. 24)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비전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 전략 : 진정한 지방 주도 균형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지방 고유 특성 극대화
-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발굴·추진
- 실행력 제고 : 법제도 개선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실행력 강화
  -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법법 제정
  - (조직) 심의 · 의결 기능이 강화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 확보
  - (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지역 간 협력 기반 위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사업 추진
  -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지방 시대 종합계획 및 관련 사업의 재정적 지원 효율화

현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자료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 (2023. 2. 24)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전략 1 진정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③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전략 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창출

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⑥ 공공기관 이전 등 성장거점 육성
⑦ 지방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3 지방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

⑧ 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⑨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⑩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조직) 지방시대위원회 (계획) 지방시대종합계획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현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자료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 (2023. 2. 24)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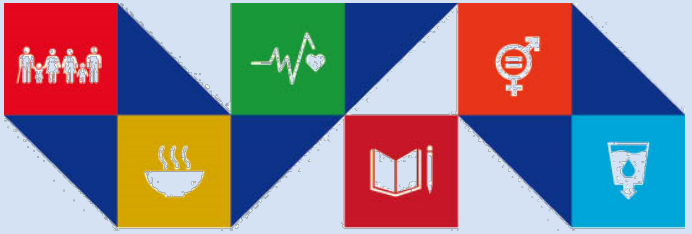
이것이 현 정부가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독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LOCALIZING
THE SDGs

혼돈하지 말자

지방 지속가능발전 두 개의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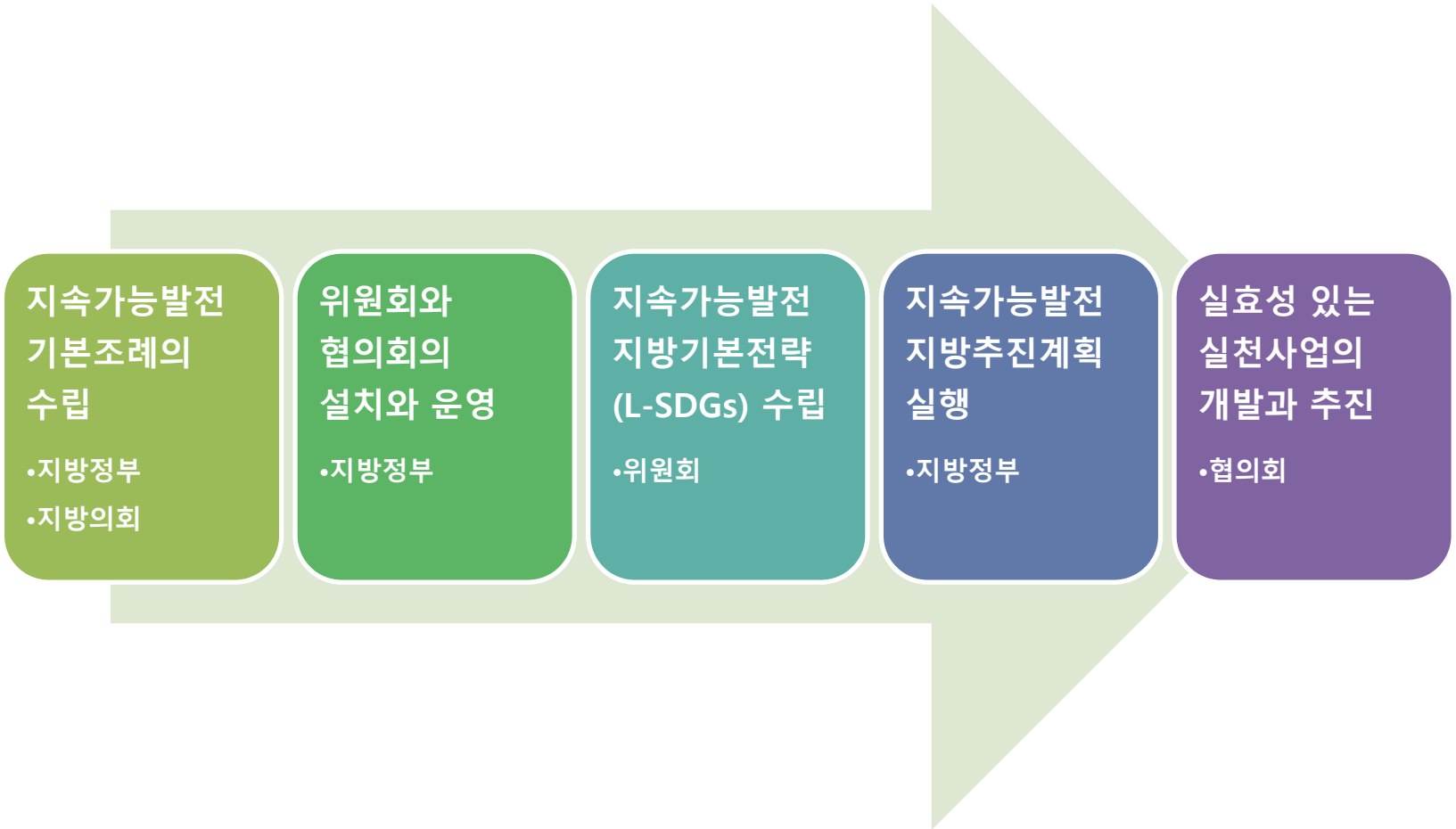
지방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협의회



구 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 격	심의·의결기구 정책 자문	민관협력기구 협력사업의 추진 (국내외 협력,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
역 할	SDGs 계획 및 평가보고서 등 심의·의결, 지속가능발전정책 자문	SDGs 작성·이행·평가 참여, 민관협력 실천사업 수행
운 영	행정부서에서 간사 기능 수행	사무국 별도 운영

지역 차원의 조정	지역 수준의 대응
• 2030 의제 이행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영	•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형성 • 문제해결 솔루션 개발 • 필요에 기반한 지역 수준 대응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 흐름과 역할



위원회가 없으면? 협의회가 위원회 역할까지 겸하면 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격

❖ 협의회의 성격 ⇨ 민관협력단체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단체**>

✓ 관련법령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 3항 및 제28조 4항**

민관협력단체의 정의	법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3항 법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4항
민관협력의 범위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지원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뭐하는 곳인가요?

“더 이상 UN까지 들먹이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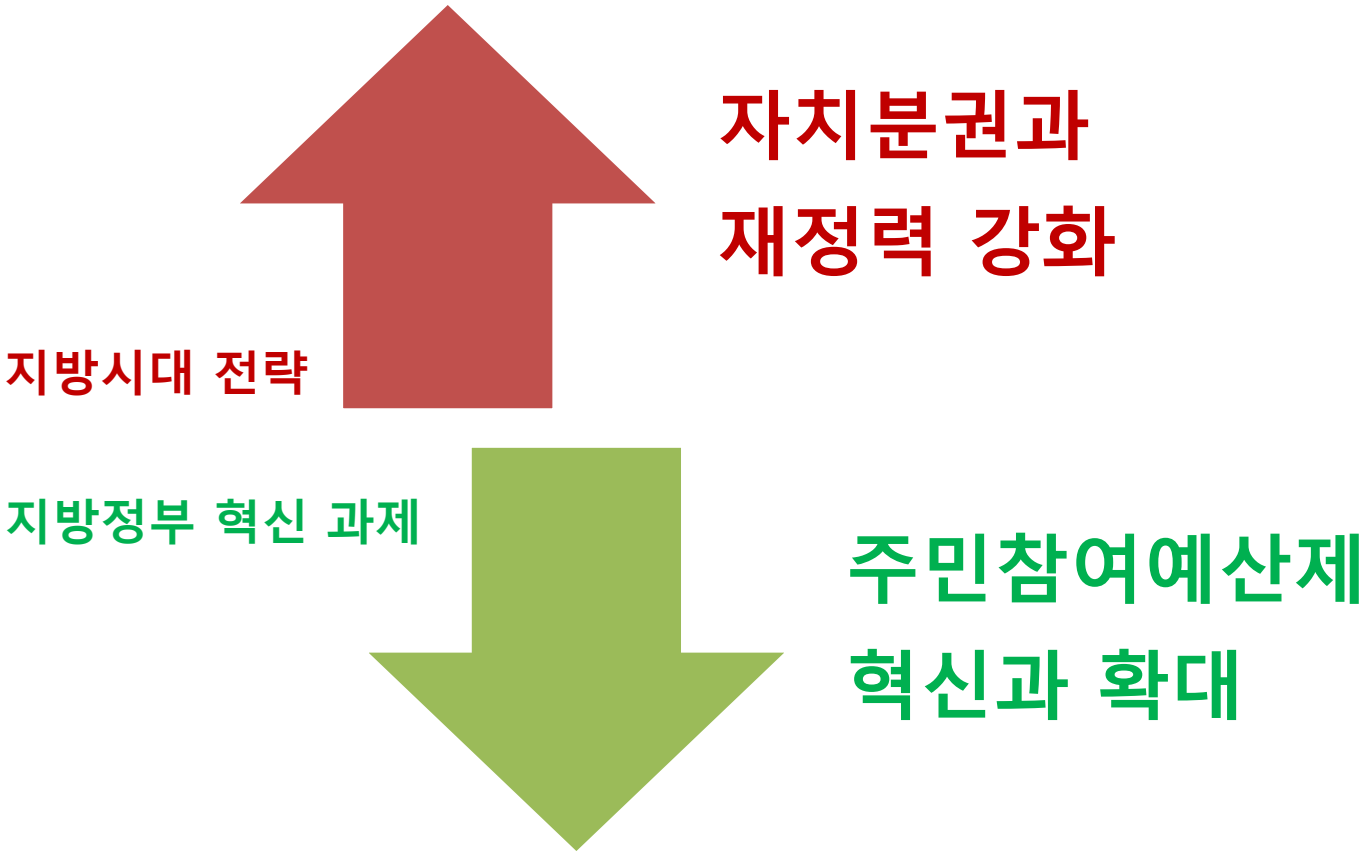
지방정부에서 만든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단체입니다.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의 역할과 과제

정부가 보는 지방 지속가능성의 가장 큰 문제

지방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혁신 과제

-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 대응을 중심으로



지방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혁신 과제

-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 대응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전략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지방정부 혁신 과제

지방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확산과 촉진

지방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혁신 과제

-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 대응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전략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지방정부 혁신 과제

사회교육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재편

지방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혁신 과제

-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 대응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전략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정부 혁신 과제

구도심과 혁신도시와의 격차 완화

지방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혁신 과제

-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 대응을 중심으로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

지방시대 전략

지방정부 혁신 과제

파트너십 구축과
시민참여의 확대

지방SDGs 목표별 사업 진행 (경남 사례)

경남SDGs		주요 관련 사업	'23년 협의회 사업
1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 기후위기 취약계층 현황조사 • 취약산업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한 평생학습,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대학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메뉴얼 개발 • 경상남도 SDGs 유튜브 스튜디오 운영 • 성평등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 캠페인
2	친환경 생태농업 기반 확대로 농업의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	• 도농상생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 유통생태계 확장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3	공공의료의 권역별 확대와 질높은 공공돌봄 서비스 실현	• 커뮤니티케어 홍보 및 수요조사	
4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대	• 지역 평생학습 자원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발·보급 • 지속가능발전 인재 양성	
5	일상 속 평등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사회 실현	• 시군 성평등 수준 개선 홍보·교육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DB 구축	

지방SDGs 목표별 사업 진행 (경남 사례)

경남SDGs		주요 관련 사업	'23년 협의회 사업
7	탈탄소 에너지자립 실현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민 실천 활동 • 농어업축산업 종사자의 인식 개선 교육	• 경상남도 지속가능경영(ESG) 확산 및 지원활동 •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마을SDGs 추진 • 지속가능발전 유관단체 간담회 및 공동워크숍 • 탄소중립 실천운동 등 전국 공동사업 참여 (자전거출퇴근챌린지 등)
8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경제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 사회적경제·공유경제 청년인재 양성 교육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전환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홍보·교육 • 대기업-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상생협력 조직	
10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불평등 완화	• 지역자원 및 실태조사 • 불평등 완화를 위한 도민 공론장 운영	
11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공동체 실현	• 대중교통 이용자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공동체교육 및 주민협의체 지원활동	

지방SDGs 목표별 사업 진행 (경남 사례)

경남SDGs		주요 관련 사업	'23년 협의회 사업
6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	• 하천 오염방지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 '환경 아이디어 찾기' 한걸음 더, 100인 도민회의 • 전통시장을 위한 재사용 쇼핑가방 기부 및 공유 플랫폼 운영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캠페인 • 도민과 함께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12	소비와 생산의 전환으로 자원순환사회 실현	• 지역특성별 자원순환교육 실천활동 개발·보급 •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	
13	2050년 경남탄소 중립 실현	•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도민 참여 조직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군 협력방안 개발	
14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 돌려주기	• 해양쓰레기 수거 도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해양보호구역 주민·방문자 교육	
15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의 권리 실현	• 생물자원조사 및 보호활동 • 생태계서비스 인식증진 교육	

지방SDGs 목표별 사업 진행 (경남 사례)

경남SDGs		주요 관련 사업	'23년 협의회 사업
16	거버넌스 기반으로 조례와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향상	• 조례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연구 참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 시군 협의회 컨설팅 및 공동워크숍
17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평가 지원	• 경남도-시군 상시 지속가능발전 협력체계 구축 • 시군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교육	

지방자치분권 확대와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는
여야가 없다

지역에서 SDG를 현실로 만드는 우리의 능력

지속가능한 지방을 위해 새로운 생각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토 론

토론 1

지속가능발전 실천기구로의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이성근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지역내 역할의 변동에 따라 관망하던 위치에서 한층 부담스러운 간섭과 책무의 자리를 맡게 됨으로 오늘같은 논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읽었다. 세분의 발제 감사 드린다. 지속협의 지속성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이라 여긴다.

박찬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의 발제중 현안진단 제2차SDGs 정상회의 전망 글로벌 SDGs 이행 현황이 (출처: POP대화 미래포럼23,4,21 윤경호) 인상적이었다. '요원하거나 진전이 없고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었다. 절대 공감이랄까. 국내 상황 또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특히나 윤정권의 등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노골적 퇴행은 그 평가(SDGs 시민넷)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문득,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뭘 해야 하는가 였다.

때마침 전국협의회는 혁신과 비젼 특위를 가동하면서 지속가능발전법 체제하에서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현실적 장벽과 변화의 방향을 논의해왔다. 적절한 지적이라 본다.

그래서 묻는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은 무엇인가. 새삼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좌표라 본다.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왜 나는 부산지속협에 그토록 오래 머물렀는가.

사실 지속이란 단어가 애초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같이했던 시간 뒤돌아 보면 몇 가지의 실천적 의제는 일상화되었고 상식으로 만들었구나 싶다. 하지만 그 이상은 그다지 진전이 없었다. 앞서 언급한 SDGs 이행 현황을 말함이다.

수준에 하나도 버거운데 무려 17개 목표를 관통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번히 보이는데 거기다 주무부처의 변경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위원회에 대한 정서적 반감, 여기에 위임이냐, 위탁이냐 에서부터 간섭과 갑질의 지방정부가 가지는 태도

와 비협조는 스트레스를 심히 유발시키며 지속협의 근간을 흔든다.

토론자의 그간 살아온 이력과 활동 터전이 다소 전투적이라 지속협같은 중간 지원조직? 은 답답해 보일 때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를 의식하여 스스로 금을 긋는다. 민감한 지역 의제는 다루기 망설여 하기도 한다. SDGs에 그런 것이 있나.

부산 지속협은 활동의 전권을 사무처에 일임한다. 상임회장을 비롯하여 회장단들은 사무처의 결정을 존중하고 측면 지원함으로써 일이 되게끔 만드는 구조다. 반면 산하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활동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노동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부문의 인사들을 위원으로 모셨다. 하지만 그분들이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연대의 관점으로 의제별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가늠해본다.

알다시피 이미 각각의 부문운동은 나름의 역사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익숙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지랖 넓게 의제 전체를 관통하기 보다는 의제의 분화와 역할 분담을 도모하는 것이 역량상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가장 난감한 사실은 조례를 만들면 뭐하나. 시의 정책 속에 녹아들어야 할 SDGs는 부재하고 가끔 이벤트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주류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민간협력, 굿 거버넌스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한편 분권과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바라본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해석이다. 이미 비대해져 수용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럼에도 독식주의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날이 갈수록 빈약해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우적이며 마구잡이로 생산해내는 지방정부의 거대개발 프로젝트 앞에, 거기다 그런 것들이 지역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 커넥션화되어 한 지역을 도륙내거나 절단낸다면 지속협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할까. 매우 경계해야할 지점이지만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그 양상은 심화되고 있고 전국적이다. 이로인해 SDGs 목표1, 8,9,10,11,14,15는 후퇴 내지 요원에 머물 것이다. 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일방적 개발을 합리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차용하는 무뢰가 거리낌없이 자행된다. 이런 횡포에 지속협이 개입해 본 일이 있던가.

지속협 중앙사무처의 시각과 지역 지속협의 결은 같을 수 없다. 무리없이 잘 나가는

지역도 있는 반면 어쩡정한 곳도 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어쩌면 시민운동의 큰 지평속에 지속협의 위치가 어중간한 데서 오는 선명성의 부족이 오늘에 이르게 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다양한 스펙트럼이 만들어내는 무지개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보다 더 시대와 현실에 천착하는 자세를 품어야 할 것 같다.

토론 2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활성화 전략에 관한 첨언과 추가 제안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김찬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실천 플랫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의견

코로나 이후 2050년까지 SDGs 이행 불투명한 시점에 현재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가 맞이할 미래는 지금까지의 지구와는 상당히 다른 시대를 살 것이라는 예견이 지배적. 그 시대 당사자로 살아갈 세대가 바로 M세대 후반, Z세대 등 밀레니얼 이후 세대. 하여 국가단위에서 현재세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온 전국지속협이 미래세대가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로 지속가능발전 생태계에 참여할 교두보를 마련해줄 역량과 신빙성이 충분하다 사료됨.

지방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의견

비수도권 지속불가능성 문제 해결 급선무는 지역소멸 이슈. 그 중에 대두되는 것이 청년층 이탈의 가속화는 광역시들도 겪고 있음. L-SDGs가 수립되고, 추진된다 하여도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해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단 기대감이 미래세대에게 자리 잡지 못한다면, 토착민 청년들 외에 유입될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사례들로 미뤄보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한 편,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전면에 애향심 함양을 위시한 인구소멸 대응 프로그램을 청년들에게 추진하기란 청년을 도구화한다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을 것.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및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안에 관한 의견

전국의 과반수 이상이 L-SDGs 수립 및 SD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 수립된 L-SDGs는 향후 미래 세대가 함께 지역목표를 인식하고 감당해낼 의제들에 어떻게 공동 수립하고 공동실천하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음.

또한 지방차원 SDGs 콘텐츠 부족에 문화예술 영역(사진, 영상, 미술, 무용, 음악 등)과 수준급의 접목 사례가 잘 없었음. 올 봄 국제교류재단에서 17가지 주제로 모션포스터, 픽토그램 등 '오늘부터의 세계'를 주제명으로 주한 체코 대사관과 협력해 개최한 SDGs 사진전이 시민들에게 호평을 얻은 사례도 있음.(작가 : 다비드 톄신스키).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활성화 전략에 관한 첨언과 추가 제안

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의제별 네트워크 분야에 '청년'분야 신설

1) 현재 청년SDG 기관들 이상 느슨한 네트워크로서 각 단체의 특수성 존중하는 조직 필요.
2) 극도의 학령인구 감소세 -〉 학교안 + 학교 밖 활동가단체 + 기업 + 연합체를 아울러야.
3) 현재 세대(전국지속협)와 미래 세대(청년네트워크)가 힘을 합쳐 세대통합의 목소리 낼 것.

2. 지역 SD 추진 체계에 '청년정책 거버넌스'와의 협력 필요

1) 청년정책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는 전국 청년들 모두 낮음.
2) 청년기본법(20.8.5 시행)따라 조정위원회(심의), 센터(중간지원), 네트워크(풀뿌리) 활성화.
3) 지역별 센터현황, 담당과, 위임된 주관 단체들 다른 점 고려해 SD추진체계 협력이 가능.

3. 지역 문화 예술인과의 교류, 공론화 극대화

1) 국가가 대대적으로 'K-Culture'를 강조하는 흐름,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과 협력 필요.
2) 지역SDGs 수립 때부터 Mgos에 문화예술인, 기획자 등 포함되어 콘텐츠 다변화 가능.
3) 참고사례 : 원주SDG9 / 중점과제 - 창의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창의문화, 생태문화.

토론 3

지속적인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요청하며

이클레이(ICLEI)한국사무소 소장 박연희

약 30년간 축적해 온 협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기초로 혁신을 위한 논의를 이어 온 '혁신과 비전 특별위원회'의 노력을 치하함. 이러한 논의가 협의회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함.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드림.

오늘의 토론은 전국협의회가 지역 지속협의 네트워크를 너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견인하는 허브'로 역할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 과제 두 가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함.

첫째는 '혁신 역량을 갖춘 활동가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근 활동가들이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채택하고 함께 추진해 가기 위한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전국 각지에서 축적해 온 지속협의 활동 경험과 노력들이 혁신을 통해 새롭게 조명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 지속협이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함.

둘째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활동 주체와 다양한 노력을 한 데 모아내는 신뢰도 높은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
이 대회가 지속협들 만의 대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현실을 진단하고, 공동 노력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함.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역 지속협들의 노력이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효과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내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토론 4

지속가능발전 실천기구로의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오수길 SDSN KOREA 사무총장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전국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월간지를 창간하여 현황과 사례 전파를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수익사업을 창출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교육 프로그램 취합 및 제안, 지역협의회의 사무국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성장

○ 지속가능발전과 ESG 선도 기업의 발굴과 적극적 펀딩

○ 미래의제의 발굴과 선도, 유엔 미래전략회의 준비,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교류

○ 총괄, 전담부서가 (분과위원회 간사 또는 전문위원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자주 열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원의 민간 실천과 분야별 연계 의제 또는 지역의 핵심 현안을 전달하거나 결합

○ 전담부서가 전담부서만의 일이 되지 않도록 사업과 사업 수행방식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별 부서의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데 기여

○ 자치분권, 지방소멸 관련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에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구상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단체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촉진하고, 교육청이나 문화단체,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를 모색

○ 각 지역의 상황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지역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데 집중

2023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주 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간일 2023년 4월 26일(수)

본 자료집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23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으로 제작되었으며, 소유권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습니다.